

2018

2018

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

규제완화 정책

동향보고

2018.08. part1 제 103 호

Report

of Trend

Contents

I . 정부 추진동향

1. 규제혁신과 민생경제 법안 간극 조정 나선 여야 3
2. 혁신성장 컨트롤타워 '지역혁신협의회' 내달 출범 4
3. 규제프리존 + 지역특구 = 규제완화구역법 나온다 .. 기재위 전담 5

II . 수도권 추진동향

1.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 " 수도권 규제 · 예산 역차별 정상화시켜야 " 6
2. 40 년 수도권 규제 '저성장 늪'... 수정법 철폐 급선무7

III . 비수도권 (지역) 추진동향

1. 제 2 균형발전 · 지방일자리 창출 시급 8
2. 우수 인재 유출 막아야 지방이 살고 지역균형발전도 가능 9
3. 잇단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'꿀 먹은 병어리' 10

1. 규제혁신과 민생경제 법안 간극 조정 나선 여야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8.01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한국일보

02

주요내용

■ 규제혁신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건

-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, 바른미래당 등 여야 3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국회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(TF) 가 31 일 회의를 갖고 규제혁신 법안 등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
- 하지만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민생경제법안들도 각론에선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해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
-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남
 - 오늘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관련 법안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다 제출했고 일일이 다 검토
 -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도 있어 이걸 다 분류
 -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해당 상임위 간사간 협의를 한 번 거쳐 합의가 되면 그대로 하면 되고, 쟁점이 남은 건 다시 TF 로 가져와 추가적인 논의
- 8 월 임시국회 최대 관건은 규제혁신 법안
 - 민주당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'규제 혁신 5 법' 처리를 주장
 -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지역특구법과 큰 차이가 없어 병합심사를 하면 된다는 입장
 -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로 맞섬
 - 한국당은 규제혁신의 모법인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
- 합진규 정책위의장
 - 비교를 하자면 규제프리존법은 제정법이고 민주당의 규제혁신 5 법은 일종의 파생상품
 - 법안 명칭도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한 데 이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음
- 민생경제 법안 중에서는 상가계약 재심청구권을 현행 5 년에서 10 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나, 가맹점주나 대리점주 등이 단체를 결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우선 처리 목록에 올려 놓은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
- 야당의 한 관계자
 - 무과실책임주의 등 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일부 법안의 독소조항을 빼지 않으면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

2. 혁신성장 컨트롤타워 '지역혁신협의회' 내달 출범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8.08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정책브리핑

02

주요내용

■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…지역내 부처 공모사업 검토 조정 등 총괄

- 지역에서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 지역혁신협의회가 내달 출범
- 정부는 8 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 (충북 도지사) 공동주재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'지역 혁신 협력체계 구축 방안' 을 논의
 - 이번 회의는 제 4 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의 일환으로 개최
 -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시도지사연석회의를 겸해 진행
 -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17 개 시·도지사, 장병규 4 차산업 혁명위원장,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이 참석
- 이에 따라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역혁신협의회를 신설, 지역 혁신성장을 주도할 지역혁신협의회는 오는 9 월 21 일 전국적으로 출범할 예정
 - 위원은 균형발전위원회, 지역혁신기관, 기초단체장 등의 추천을 받아 20 명 규모로 시도지사가 위촉
 -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 발전계획과 사업에 대한 심의·조정, 평가·관리 등의 역할
 - 신규 과제 발굴도 담당, 특히 지역 내 부처 공모사업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
 - 각 시도는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해 지역혁신협의회의 업무를 지원
 - 각 전문기관에 설치할 지역혁신지원센터는 지역혁신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계 협력
 -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업무도 담당
- 정부는 지역혁신협의회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거점으로 자리잡도록 역할과 권한 강화를 추진
- 이와함께 지역 내 타 기관과의 연계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
- 지역혁신기관 간에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혁신협의회가 중점 기능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
-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기획과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, 지역 주도형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혁신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

3. 규제프리존 + 지역특구 = 규제완화구역법 나온다 .. 기재위 전담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8.10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머니투데이

02

주요내용

■ 한국당 '원조법' 주장에 잠정 합의...단일 법안에 새 이름 부여 예정

- 혁신성장의 주춧돌이 될 지역특구법 (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) 이 규제프리존법 (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) 과 합쳐져 단일 법안이 됨
 - 두 법안의 심사 주체는 기획재정위원회로 단일화
- 국회 민생경제법안 TF(태스크포스) 는 7 일 회의를 통해 이 같이 합의
 - 당초두 법은 지역특구법 소관상임위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에서 논의될 전망이었지만 이에 따라 규제프리존 소관 상임위원 기재위에서 심의
- 더불어민주당·자유한국당·바른미래당 여야 3 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을 병합 심사하는데도 합의
- 이를 심사하는 상임위 문제는 좁혀지지 않았음
 - 민주당은 산자위에서, 한국당은 기재위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
 - 바른미래당은 기재위가 우선이지만, 산자위도 상관없다는 입장
 -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에 각 상임위 간사간 의견 조율을 요청했고, 한국당은 간사 간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
- 한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
 - 규제프리존법은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가 걸쳐있는 법
 - 이런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에서 심의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
- 두 법 모두 특정 지역에서 태동하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뼈대
- 한국당이 기재위 심사를 주장하는 것은 규제프리존법이 '원조법' 이라는 인식 때문
 - 규제프리존법은 자유한국당이 19 대 국회에서부터 주장해온 법
-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역특구법을 내놓음
 - 규제프리존법을 대체하는 법안, 올해 3 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
 - 하지만 지역특구법의 추진에 한국당은 반발, 법안이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을 베낀 법안이라는 주장
- 심사 결과에 따라 법안 명칭이 변경될 여지도 있음
 - 두 법안의 내용을 상호 수용해 새 법을 만들기 때문
- 규제프리존법은 기재위 검토보고서
 - 법률의 제명에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적
 -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새 명칭으로 제안한 바 있음
- 하지만 한국당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'규제프리존법' 이라는 명칭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

1.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" 수도권 규제 · 예산 역차별 정상화시켜야 "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8.02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중부일보

02

주요내용

■ 수도권이 각종 규제와 예산에 있어 오히려 역차별

- 22 년만에 인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20 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위원장에 선출된 자유한국당 출신 안상수 (인천 중 · 동 · 강화 · 옹진) 의원은 29 일 중부일보와의 인터뷰
-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에 선출된 소감
 -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을 만들고 , 예산을 심의 · 승인하고 , 이를 결산하는 것
 - 예결위원장은 나라살림을 다루는 국회 책임자로서 다선 국회의원도 한번 맡기 어려운 자리
 - 기업에서 20 년간 있으면서 실물경제를 잘 알고 , 300 만 인구의 인천광역시장을 8 년 동안 하면서 직접 예산편성과 집행
 - 또한 , 3 선 국회의원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예산소위원회 등을 통해 국가예산을 다룸
 -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, 국가미래를 위한 작은돌 하나 쌓는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
- 야당 예결위원장인데 , 정부와의 관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.
 - 여야를 떠나 국가적인 현안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, 잘못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해서 국가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
 -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증원 등 세금일자리확대사업 , 현금살포식 포퓰리즘 예산 등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정책을 펴고 있음
 - 국민경제의 3 주체인 정부 , 기업 , 가계 중 기업과 가계는 어려움에 신음중
 - 특히 , 이 정부 들어서 인프라 사업이 무슨 죄악인양 마구 줄이고 있는데 , 대형토목공사는 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꼭 필요한 중소규모의 인프라 사업은 늘려야 함
 - 인프라 사업은 지역내 중소기업 일자리 · 일자리 창출은 물론 ,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게 되고 , 나아가 물류 · 관광 · 레저 산업을 견인하는 기반
 - 또한 , 미래먹거리를 위해 R&D, 4 차산업 등 미래신성장산업 발굴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함
 - 기업이 활력을 찾고 ,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가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, 최선의 노력
- 인천출신 예결위원장으로 지역에서 기대가 크다 .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.
 - 22 년 만에 인천출신 예결위원장 , 위원장으로서 균형감각은 가지고 임하겠지만 ,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도 최선의 노력
 - 과거 인구 , 재화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, 지금은 수도권에 있어 오히려 역차별
 - 잘 되는 지역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, 어려운 지역은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지 , 잘 된다고 발목을 묶어버리는 것은 결코 좋은 정책이 아님
 - 앞으로 정당에 관계없이 경기 ·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광역단체장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

2. 40 년 수도권 규제 '저성장 늪'... 수정법 철폐 급선무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8.03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중부일보

02

주요내용

■ 공장건축 총허용량 544 만 5 천㎡ 신·증설 제한... 업종변경 불가
 ■ 3 년간 산단도 1 개밖에 못 지어... 경기도 " 균형발전 위해선 개정 필요 "

- 경기도 발목에는 40 여년 동안 억지로 채워진 족쇄, 떼내야 떼낼 수 없었던 수도권 정비 계획법
 - 이인제, 손학규, 김문수, 남경필 등 역대 도지사들이 약 20 여년에 걸쳐 수도권 정비 계획법 철폐를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철저히 의견을 묵살해 왔음
- 민선 7 기가 시작되면서 경기도가 내건 첫번째 캐치프라이즈가 '경기 퍼스트'
 - 여기에는 더이상 경기도가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겠다는 뜻
- 이를 위해 가장 선행해야 할 문제,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
 -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그동안 경기도를 과밀억제권역·성장관리권역·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건축면적이 500 ㎡ 넘는 공장의 신설·증설·이전 그리고 업종 변경을 막아왔음
 - 수원시·성남시·안양시·부천시·광명시·과천시·의왕시·군포시 등 남부 대도시권과 의정부시·구리시·하남시·고양시 등 북부 대도시권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음
- 실제로 지난 4 월 국토부가 정한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올해부터 2020 년 말까지 544 만 5 천㎡ (약 165 만 평)
 - 3 년간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하나밖에 지을 수 없다는 말
 - 도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혜택이 주를 이루고 있음
- 이처럼 입지 규제가 풀리지 않다보니 수도권에 공장 증설이 허용되는 첨단업종 품목 지정도 2011 년 8 월 이후 7 년째 갱신되지 않고 있음
- 경기도에도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던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옴
- 6·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수도권 3 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집권여당이 배출한데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 현 정부의 국토 정책에 기초를 같이하기로 합의했기 때문
- 당장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수도권 규제와 군사 규제에 발목여저성장 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동북부 지역부터 하나둘 特約타래를 풀어나간다면 경기도민이 염원하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철폐도 그리 멀지 않은 이야기
- 도 관계자
 - 최근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경기동북부 지역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경기동북부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수도권 정비 계획법
 -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40 여년 동안 시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실정에 맞는 법안으로 개정되는 것이 필요

1. 제 2 균형발전 · 지방일자리 창출 시급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8.10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한겨레

02

주요내용

■ 세종시 · 혁신도시엔 인구 불어, 공공기관 150 여곳 지방 옮겨야

-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, 산업 쇠퇴로 말미암아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‘쇠퇴’ 를 거쳐 ‘소멸’ 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
 - 노무현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쇠퇴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출산율 개선을 위해 수십조원을 쏟아부었으나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
 -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 이어 2 차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의 일자리와 교육, 주거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
 - 나아가 유럽 나라들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옴
- 지방정부들이 인구 유입과 관련해 주목하는 사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
 - 세종은 출범 6 년 만에 인구 20 만명이 늘어났고, 공공기관 110 곳을 전국 10 곳에 이전한 혁신도시에도 지난 6 월까지 18 만 2882 명이 입주
 - 이들 도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등의 일자리를 바탕으로 좋은 주거와 교육 환경을 제공해 급속한 인구 증가를 이끌어냈음
-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
 - 2 차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, 중앙정부의 대부분이 세종시로 옮겨졌으므로 아직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150 여개 산하 공공기관들을 모두 지방으로 옮겨야 함
 - 이와 함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 - 대학 - 연구소 클러스터 (복합 산업단지) 를 발전시켜야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끌어들이 수 있음
- 마강래 중앙대 교수 (도시계획)
 - 문제는 일자리, 지방 대도시의 인구를 유지, 성장시키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키워야 함
 -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광역 경제 · 생활 공간을 계획해야 하고 이런 구조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도 필요
- 지방정부들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교육과 일자리, 주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
 - 광주는 자동차 생산직 일자리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청년층 인구 증가를 노리고 있음
 - 또 여성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를 추진
 - 부산은 청년 창업 · 취업 지원 재단을 만들고,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과 ‘청년 머물자리론’ 등 주거 정책을 준비 중
 -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 시기별 출산 · 보육 정책도 준비
 - 차우규 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 (한국교원대 교수)
 - 세계 최저의 출산율 탓에 인구 감소로 가는 것은 불가피, 동거인 가정, 다문화 가정, 이민자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수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

2. 우수 인재 유출 막아야 지방이 살고 지역균형발전도 가능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8.10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문화일보

02

주요내용

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에서 해당 지역 인재를 과감히 쓸 수 있어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, 교육이 '희망의 사다리' 가 될 수 있다는 것

- 20 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은 3선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
 - 이 위원장이 맡은 교육위는 이번 국회에서 교육 현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
-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난해 자신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시킨 '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' 개정안이 지역에서 잘 지켜지는지 보겠다고 했음
 - 이른바 '지역인재 희망법' 으로 불리는 개정 특별법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인원의 30% 이상을 해당 지역 인재로 의무 채용하고, 채용 현황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
 - 정부도 올 초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목표치를 정함
-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
 - 지금도 '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' 는 옛말이 통용되고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이 강제성 없이 단순 권고 수준에 그치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취지도 무색해질 것
 - 또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수도권 대학 출신이 역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
 - 수도권을 중심으로 '중앙' 과 '지방' 으로 양분된 대한민국의 사회구조가 지방은 물론, 수도권 대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
 - 지역의 인재가 수도권으로만 몰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수도권에서의 경쟁률도 떨어져 안정된 일자리가 공급될 것
 - 그는 자신도 수도권에서 대학 (인하대) 을 나왔고 지역구 (경기 수원갑) 를 두고 있다며, 수도권 대학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
 -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합하지 않은 석·박사 이상의 직무 등에 수도권 대학 출신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도 마련
 - '노력하면 꿈은 이뤄진다' 는 말을 건넬 수 있는 선결과제는 그 노력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

3. 잇단 수도권 규제완화 비수도권 '꿀 먹은 병어리

01

개요

보도형식	언론기사	보도일자	2018.08.12
보도대상	전국	보도매체	충북일보

02

주요내용

■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속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. 상황이 이런데도 비수도권 지자체의 대응은 무기력

- 이명박·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수도권 개발 문제를 집중 성토했지만, 최근 비수도권 지자체는 물론, 상당수 NGO 마저 '침묵의 카르텔' 이
-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
 -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남양주 진접 2 지구 (129 만 2 천㎡), 경북 경산 대임 (163 만㎡), 성남 금토 (58 만 3 천㎡), 성남 북정 (64 만 6 천㎡), 구리 갈매역세권 (79 만 9 천㎡), 부천 괴안 (13 만 8 천㎡), 부천 원종 (14 만 4 천㎡), 의왕 월암 (52 만 4 천㎡) 등
 - 이 중 경북 경산을 제외한 수도권 8 곳 (480 만 4 천㎡) 의 공공택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가 포함
 - 또 이 중 70% 인 336 만 1 천㎡ 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에 묶인 곳으로, 가장 면적이 넓은 남양주 진접 2 의 경우 46% 인 58 만 8 천㎡가 그린벨트
-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하는 그린벨트는 1971 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로 시작
- 이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무더기로 해제함에 따라 일각에선 그린벨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
 - 문제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보수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
-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9 년 강남 세곡·내곡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변 시세보다 50~80%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
 - 하지만 '로또 아파트' 논란과 함께 집값 하락을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로 결국 제도가 폐지
 -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과 전국 상당수 NGO 들은 거세게 반발
 - 비수도권 지자체 역시 '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이 죽는다' 며 하루가 멀다하고 기자회견과 주민들을 동원한 집회·시위
-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는 여야 또는 보수·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으로 인식
 - 다만, 비수도권 지자체와 NGO 들은 이구동성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성토
 - 이런 가운데 주택공급을 넘어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
 -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창현 (의왕·과천) 의원은 최근 그동안 20 만㎡ 이상으로 제한한 국토부 지침 때문에 18 만 5 천㎡인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됐으나 국토부의 개정 고시로 예외를 적용
- 지역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
 - 수도권 규제완화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국토균형발전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
 - 과거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반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